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8.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인천○○자○○○○호 화물자동차의 차주이고, 2016. 3. 5.부터 2016. 3. 23.까지 의무보험이 미가입 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192,380원을 편취한 사실로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7. 4. 14.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유가보조금 192,380원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17. 5. 8.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192,380원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6개월(2017. 6. 5. ~ 2017. 12. 4.) 지급정지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①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을 ○○손해보험사에 2개월씩 6회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납하고 있었던 점, ② 동종업계에서 영세사업자들이 청구인과 같이 의무보험료를 분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만료 전에 미리 차주들에게 통보하는 등 관리해 주고 있으나, ○○손해보험사에서 청구인에게 분납 보험료의 유예 일을 통보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보험이 실효된 것

을 알지 못하여 192,380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던 점, ③ 의무보험에 대하여 확인·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의 취소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는 별도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청구인에게 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동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29조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인천○○자○○○○호 화물자동차의 차주이다.

2) 청구인은 2016. 3. 5.부터 2016. 3. 23.까지 의무보험이 미가입 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192,380원을 편취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3)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7. 4. 14.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유가보조금 192,380원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4) 이에 피청구인은 2017. 5. 8.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192,380원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6개월(2017. 6. 5. ~ 2017. 12. 4.) 지급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17. 5. 16.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192,380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다. 판 단

1)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서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면서 제5호에는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5에서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1차 위반 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로 정하고 있다.

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에서는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9조는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로 정하고 있다.

2)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16. 3. 5.부터 2016. 3. 23.까지 의무보험이 미가입 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192,380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개별화물자동차차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1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손해보험사에서 청구인에게 분납 보험료의 유예 일을 통보

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보험이 실효된 것을 알지 못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3항에서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근거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를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인천○○자○○○○호 화물자동차의 의무보험 납입기한을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위반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